Field Voice

스마트그리드, 제도 수용성 높여야

제주 실증단지를 통해 추진중인 스마트그리드의 각 시스템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작업이 2014년까지 진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및 핵심표준을 개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실증을 통해 검증한 상호운용성 국가표준체계를 조기 완비해 향후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의 표준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이 스마트그리드 시장 참여자 동향, 시장 전망, 정책·제도의 전개, 표준화 및 사이버보안 대응, 주요 도전과제 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서,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로 검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최소한의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보다 발전된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전기요금제시행 '전기요금'과는 별개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시간 전기요금제는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정착될 경우, 전기 추가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계 등의 전기료 부담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의 경우, 최근 1주일 정산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날 24시간별 요금을 용도별로 산정한다. 사용자가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량 요금의 비중은 늘리고, 기본요금 비중은 기존 한전요금 기준 22%에서 10%로 낮췄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주택용은 기본요금 없이 사용량요금으로만 구성, 매월 평일과 휴일로 구분해 3단계의 차등요금을 부과한다.

실시간 전기요금제 시행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시간 전기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실시간 전기요금제 시행은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고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연구' 수준이지, 본격적인 요금 현실화 단계는 아니라고 단정했다.

'연료비 연동제' 정부고민 갈수록 깊어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물가상승'이라는 암초에 걸려 정부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이 공기업 적자를 '눈덩이'로 만들고 있어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서민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행하기에도 부담스럽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지난 3월 실시 예정이었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만큼,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요금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원유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전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각각 3조원씩 약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경제분석기관은 연동제가 시행되면 단번에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몇 차례에 나눠 올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